

총보출간물 2020-01

이민정책연구원

2019년 주요성과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Partner Organization of IOM



발행인 강동관
발행처 이민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양천빌딩 별관 2층, 3층
T 02-3788-8000 F 02-3788-8098 H www.mrtc.re.kr
발행일 2020년 5월

발간사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국가 간의 교역증대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인류의 국제이동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민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시 경제성장과 더불어 문호를 확대해옴으로써 2019년 말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의 수는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국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내 주요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해오며 그 영향력도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이민정책의 수립 요구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공조 필요성도 나날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2009년 12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간의 협정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협력기관으로서 이러한 이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정책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발간물은 지난 10년간의 연구원의 노력을 담은 것으로 주요 분야별 연구, 이민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학술행사 등의 주요 성과와 2019년의 연구·교육·협력사업 및 2020년의 사업방향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이민자와 지역사회, 정부정책과 국제관계를 아우르는 이민정책을 개발·확산하는 데에 앞장설 것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이민정책연구원장 강동관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CONTENTS

발간사

CHAPTER 01 연구원 소개

- 01.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08
- 02. 주요연혁 09
- 03. 비전 및 미션, 목표 10
- 04. 조직도 11

CHAPTER 02 2009년-2019년 연구원의 성과

- 01. 연구 성과 14
- 02. 교육 성과 19
- 03. 협력 성과 21

CHAPTER 03 2019년 연구원 사업 및 2020년 사업 방향

- 01. 언론에서 본 이민정책연구원 26
- 02. 교육 사업 28
- 03. 협력 사업 34
- 04. 연구 사업 45
- 05. 2020년 사업 방향 78

C H A P T E R

01

연구원 소개



-
- | | |
|-----------------|----|
| 01.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 08 |
| 02. 주요연혁 | 09 |
| 03. 비전 및 미션, 목표 | 10 |
| 04. 조직도 | 11 |

01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설립목적

이주민 및 이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연구, 정보교환, 조사 및 이주 관련 교육을 통하여 국가들의 이주정책 개발에 기여
국제이주법, 이주관리 및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훈련을 통해 국가들의 역량 향상
이주와 개발, 환경, 안보, 인권 및 고용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

주요기능



02

주요연혁



2007



2009



2014

2007.11.
법무부장관, 경기도지사,
IOM사무총장 간 연구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09.7.
대한민국 정부와 IOM 간
설립협정 체결

2009.9.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

2010.3.
Charles Harns 초대 원장
취임

2012.3.
국제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
아시아 사무국 유치

2014.7.
대한민국 정부와 IOM 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체결



2015



2019



2020

2014.9.
장준오 제2대 원장 취임

2017.1.
정기선 제3대 원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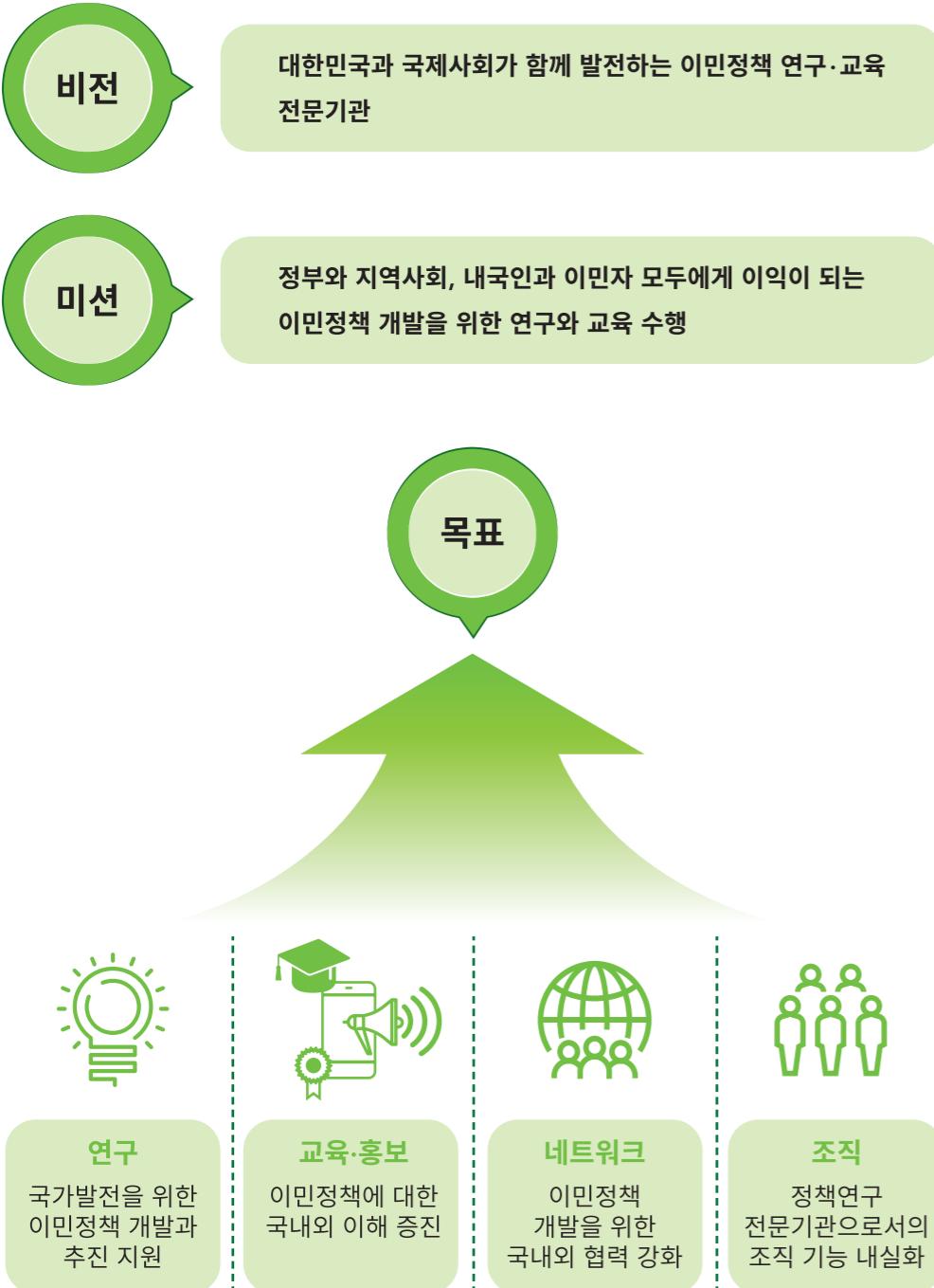
2019.11.
개원 10주년 기념 행사 개최

2015.1.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
제1지원단 선정

2020.1.
강동관 제4대 원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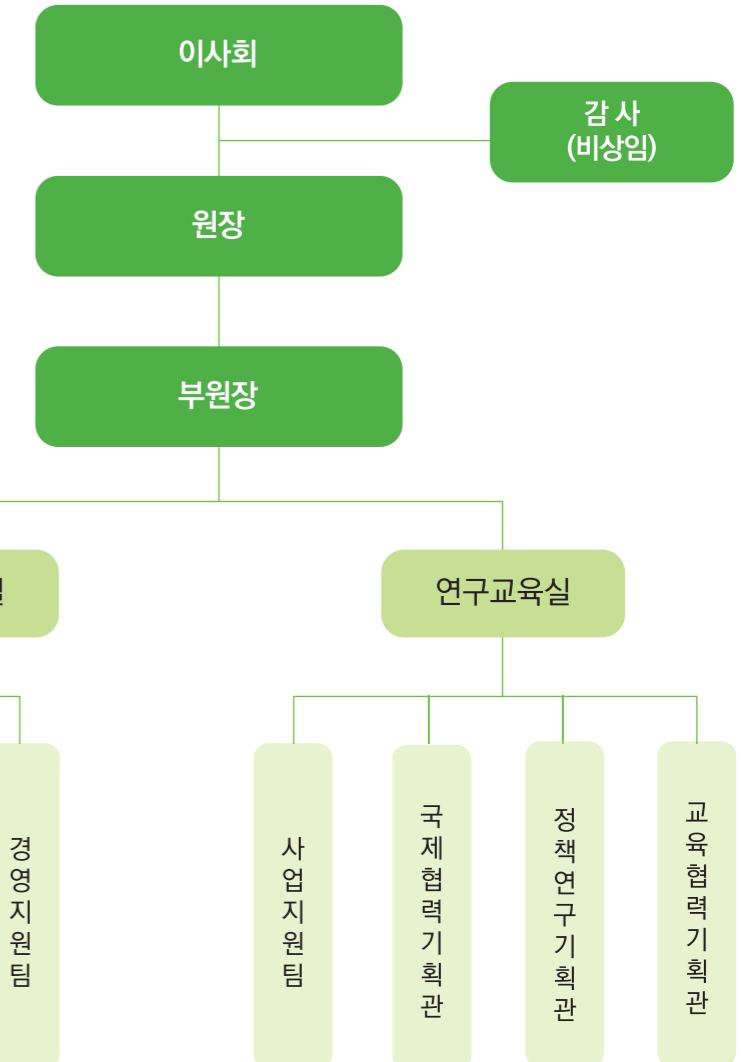
03

비전 및 미션, 목표



04

조직도



C H A P T E R

02

2009년–2019년
연구원의 성과



-
- | | |
|-----------|----|
| 01. 연구 성과 | 14 |
| 02. 교육 성과 | 19 |
| 03. 협력 성과 | 21 |

연구 성과

이민정책과 관련한 국내외 이민동향 및 정책의 조사, 연구, 분석을 통해 국가의 이민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민분야의 학제간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연구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민법·행정

체류관리, 비자, 국경보안 등 이민법, 행정, 제도 연구



이민법·행정	40건
이민경제	61건
사회통합	45건
국제이민협력	20건
이민동향분석	89건
인권·난민	27건
이민교육훈련	13건



국제비교를 통한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 관리정책
개선방안 연구



나가는 이민 통계 현황 및
개선 방안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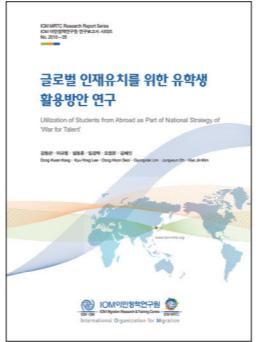
무서울 입국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민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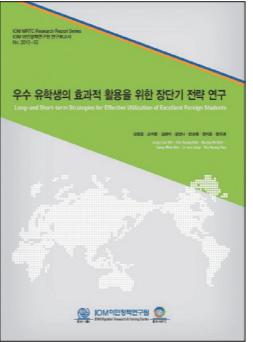
노동, 투자이민, 도입규모 등 경제적 효과 연구



이민법·행정	40건
이민경제	61건
사회통합	45건
국제이민협력	20건
이민동향분석	89건
인권·난민	27건
이민교육훈련	13건



글로벌 인재유치를 위한
유학생 활용방안 연구



우수 유학생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장단기 전략 연구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효과



이주민 자영업 종사자의
현황과 특성

사회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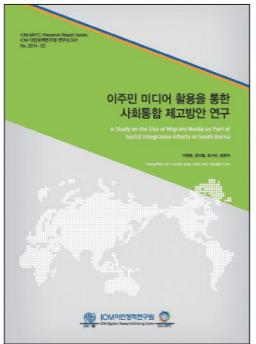
이민자와 내국인 사회갈등 분석 및 사회통합 방안 연구



이민법·행정	40건
이민경제	61건
사회통합	45건
국제이민협력	20건
이민동향분석	89건
인권·난민	27건
이민교육훈련	1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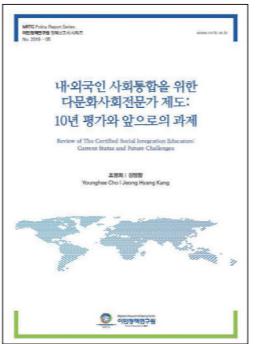
이주민 통합과 다층적 통합거버넌스의 개념적 이해



이주민 미디어 활용을 통한 사회통합 제고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이민·다문화정책 교육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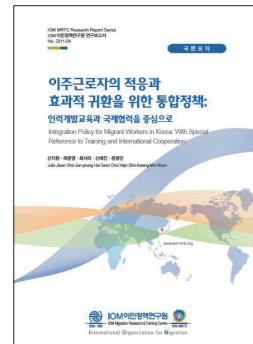
내·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사회전문가 제도: 10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국제이민협력

국제이주현상과 관련된 국제관계 및 협력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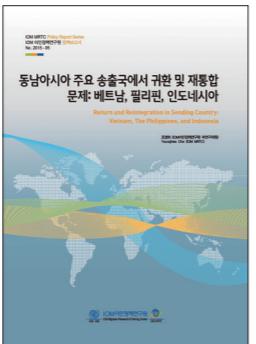
이민법·행정	40건
이민경제	61건
사회통합	45건
국제이민협력	20건
이민동향분석	89건
인권·난민	27건
이민교육훈련	1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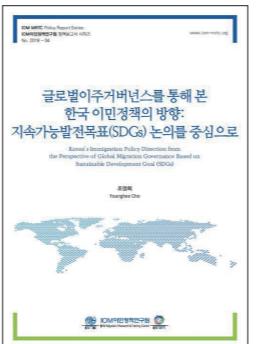
이주근로자의 적응과 효과적 귀환을 위한 통합정책: 인력개발교육과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이민협력 현황과 방향 모색



동남아시아 주요 송출국에서 귀환 및 재통합 문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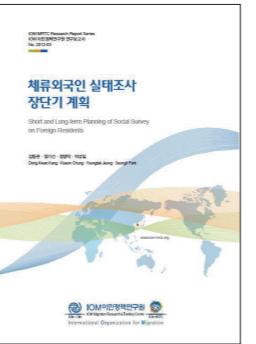
글로벌이주거버넌스를 통해 본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논의를 중심으로

이민동향분석

국내외 이민정책과 이민통계 등 현황 분석



이민법·행정	40건
이민경제	61건
사회통합	45건
국제이민협력	20건
이민동향분석	89건
인권·난민	27건
이민교육훈련	13건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장단기 계획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



국내 이주민의 취업 및 사생생활: 필리핀 출신자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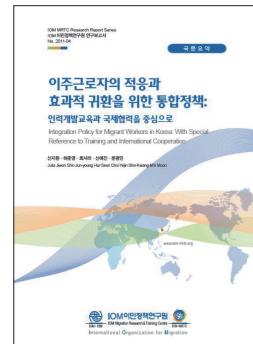
한국의 이주동향 2018

인권·난민

이민자의 인권, 국내외 난민 제도 및 현황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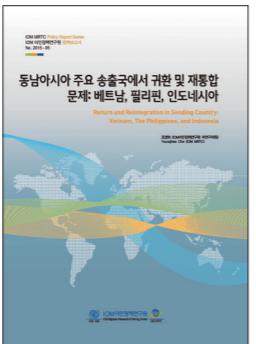
이민법·행정	40건
이민경제	61건
사회통합	45건
국제이민협력	20건
이민동향분석	89건
인권·난민	27건
이민교육훈련	1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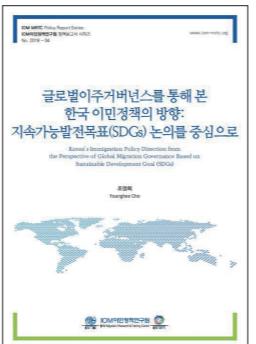
이주근로자의 적응과 효과적 귀환을 위한 통합정책: 인력개발교육과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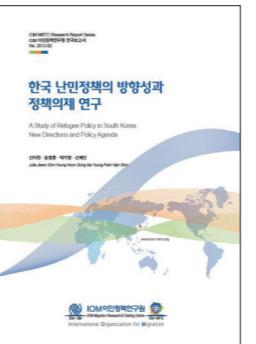
아시아 지역 이민협력 현황과 방향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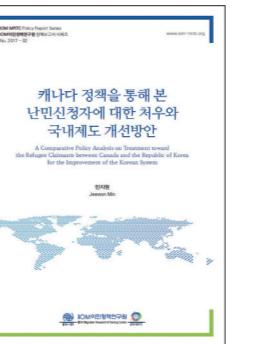
동남아시아 주요 송출국에서 귀환 및 재통합 문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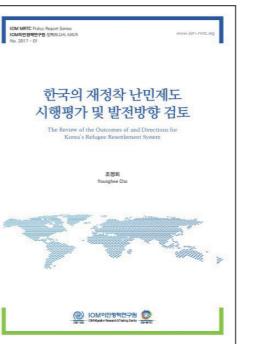
글로벌이주거버넌스를 통해 본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 난민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의제 연구



캐나다 정책을 통해 본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와 국내제도 개선방안



한국의 재정착 난민제도 시행평가 및 발전방향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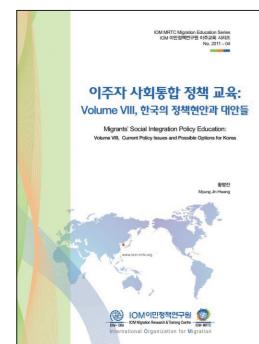
난민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이민교육훈련

이민 및 이주민, 공무원 등 관련자 교육과 훈련 사업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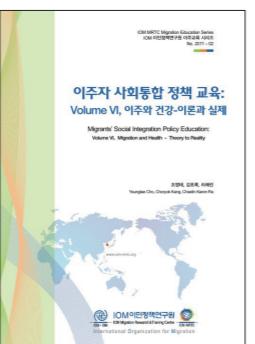
이민법·행정	40건
이민경제	61건
사회통합	45건
국제이민협력	20건
이민동향분석	89건
인권·난민	27건
이민교육훈련	13건



이주자 사회통합 정책 교육:
Volume VIII, 한국의 정책현안과
대안들



이민정책 분야의
문헌·정보 분류표 개발 연구



이주자 사회통합 정책 교육:
Volume VI, 이주와 건강·이론과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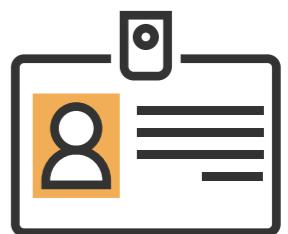
고양시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교육성과

이민정책에 대한 국내·외 이해 증진 및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맞춤 교육·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민간활동가, 대학(원)생, 외국인의 대상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정책의 개발과 실행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민간활동가



대학(원)생



외국인

공무원 대상 교육



이민정책분야 연수프로그램



이주자 사회통합 주제별 정책 교육 워크숍



국가인권위 초청 개발도상국가
공무원 협력연수



지자체 공무원
외국인 다문화 정책 워크숍

대학(원)생 대상 교육



한동대학교 대학생 방문



육군3사관 학교
다문화사회 이해 강의



제주대학교 대학생 방문



차세대 이민정책 아카데미

민간활동가 대상 교육



지역사회 다문화 관련
인적자원 역량강화 교육



고양시, 파주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자 교육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 및 이수교육



이민정책·이민법 열린강좌
보수교육 및 이수교육

외국인 대상 교육·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필리핀 이주노동자
상담자 금융 교육



유학생 진로 탐색 및
취·창업 비자 워크숍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역량 강화 워크숍

협력성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주와 관련된 전문가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정부·유관기관 및 해외 기구와의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MOU체결



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외기관

- 필리핀재외동포위원회
- 인도네시아
사회문화연구과학원
- 캄보디아대학교
- 스칼라브리니 이주센터



기타

- 메트로폴리스
- 사단법인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민정책 연구원



대학

- | | |
|------------------|--------------------------------|
|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
|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 창원대학교 글로벌다문화사회
전문인력양성 사업단 |
| • 경기대학교 | •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
| • 인하대학교 | •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
| • 계명대학교 | |
|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 강원대학교 난민연구센터 |

이민·이주 정책



이민정책포럼



외국인 정책의 새로운 지평 학술 세미나



이민정책과 아동에
관한 국제포럼



한국의 이민정책
학술 심포지엄



이민정책 계획 국가 모델에
관한 자문회의



아시아 내 이주와 개발
국제세미나

국제기구·외국 기관 협력 및 해외석학 초청



메트로폴리스 컨퍼런스 준비회의



송출국 대사관과의 세미나



OECD 국제이주과
방한 토론회



해외석학초청
방한 토론회



한·아세안
국제전문가 회의



동북아시아 디아스포라:
한·중·일·미국 그리고 북한
국제전문가 회의

사회통합·인권·난민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



다문화 500인과의 대화

민·관·학 협력



경기북부 외국인정책·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민관학 협력 워크숍



정책대화 토론파당 - 이주민과 함께 발전하는 지역사회



난민인권·국익·세계평화
학술포럼



결혼이주, 여성, 그리고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워크숍



김포외국인주민
세미나 및 토론회



난민연구 정책 포럼



수도권 시·도 산하
정책연구원 세미나



연구원·외교통상부 공동주최
세미나: 아시아 내 이주와 개발



연구원·건국대학교 이주·
사회통합연구소·호주·뉴질랜드
한인연구팀 공동학술대회



연구원·서울대 행정대학원
공동주최 이민정보원 설립
공론화를 위한 포럼

C H A P T E R

03

2019년 연구원 사업 및
2020년 사업 방향



01. 언론에서 본 이민정책연구원	26
02. 교육 사업	28
03. 협력 사업	34
04. 연구 사업	45
05. 2020년 사업 방향	78

언론에서 본 이민정책연구원



“이민정책연구원『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효과』(강동관, 2016.) 보고서, 2012년 이민자의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3.7조 원, 2026년에는 162.2조 원으로 추정”

[팩트체크] 황교안 “외국인 노동자, 한국 경제에 기여 없다” 발언 검증
(JTBC, 2019.6.19.)

[이슈&팩트] 외국인 근로자,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 없다?
(시사위크, 2019.6.21.)

[카드뉴스] “사장님 나빠요” 임금체불·폭력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연합뉴스, 2019.8.22.)

정치인의 이주민 차별 발언은 혐오를 조장하는 것
(미디어오늘, 2019.7.26.) 등 보고서 관련 21건 언론보도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대응으로 우수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 이민정책연구원에 ‘아시아 인적교류 연구센터’를 설치,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외국인 유입 규모 추산 계획”

“시흥시 외국인 정책 역량강화 학습모임,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박사 『외국인 정책: 지자체 적용을 중심으로』 강연”

시흥시, 외국인 정책 역량강화 학습모임 진행
(시민일보, 2019.8.28.)

시흥시, 2019년 외국인정책 역량강화 학습모임 개최
(브릿지경제, 2019.8.28.)

시흥시, 외국인정책 역량강화 학습모임 진행
(NPS통신, 2019.8.28.)

시흥시, 2019년 외국인정책 역량강화 학습모임 개최
(이뉴스투데이, 2019.8.29.) 등 7건 언론보도

자료 제공: 시흥시청



생산인구 출자 외국인에 빚장 연다...비자 신설·지방 거주 인센티브 (SBS, 2019.9.18.)

고령화 문제 외국인 유입으로 해결...비자 신설·지방거주 인센티브 (한국경제, 2019.9.18.)

생산인구 출자 외국인에 빚장연다...비자 신설·지방거주 인센티브 (연합뉴스, 2019.9.18.)

정부, 외국 인력 유치 적극 나선다...‘비자 신설하고 지방 거주 인센티브 제공’ (아시아투데이, 2019.9.18.)

등 8건 언론보도

“이민정책연구원 10주년 기념 행사 개최”

이민정책연구원 개원 10주년...“이민정책, 미래의 국가 전략”
(연합뉴스, 2019.11.22.)

이민정책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아주경제, 2019.11.22.)

이민정책연구원, ‘한국 이민정책의 미래 고민’ 주제 세미나
(기호일보, 2019.11.24.)

이민정책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열어
(고양신문, 2019.11.25.) 등 7건 언론보도



“제 2기 인구정책 TF 출범에 앞선 인구정책전문가 간담회에서 정기선원장 ‘이민정책 전담기관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

“인구 미래가 아닌 현재 문제”...인구정책 TF 2기 출범 (국민일보, 2019.12.12.)

“일하는 여성 위한 정책 시급”...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 열려 (세계일보, 2019.12.12.)

김용범 차관 “저출산이 나라 경제 위협한다” (머니투데이, 2019.12.12.)

정부 “인구구조변화 대응,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로 포함 적극 추진” (이투데이, 2019.12.12.)
등 14건 언론보도



[2019.11.29.] 국회입법조사처.
[http://nars.go.kr/event/view.do?categoryld=all&cmsCode=CM0032&searchType=ALL&searchKeyword=%EB%86%8D%EC%B4%8C%20%EC%A7%80%EC%97%AD%EC%9D%98&brdSeq=26519]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 세미나에서 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이창원 박사 『국내 취업이민정책 특징과 농업 분야 적용의 문제』 주제로 발표”

국회입조처,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 세미나 개최

(국회뉴스, 2019.11.27.)

국회입법조사처,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 세미나 공동 개최

(뉴스락, 2019.11.27.)

황주홍 의원, 농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세미나 개최
(일간투데이, 2019.12.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와 관련 사회 현안 공론화 필요 (한국농업신문, 2019.12.2.) 등 8건 언론보도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이민정책 워크숍

이민정책연구원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하에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해왔다. 최근 공무원의 직무에 따라 지자체, 보건직, 경찰직 공무원의 교육 수요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8년부터 대상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와 연계하여 교육시리즈를 기획·수행하였다. 2019년 주요 대상은 지자체 공무원과 보건직 공무원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였다.

전라북도 지자체 다문화·외국인정책 역량강화 워크숍

일시	2019년 9월 2일
장소	전북도청 중회의실
대상	전라북도 및 시·군 공무원 및 민간활동가 88명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통계 현황과 지자체의 전략 •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 • 이주민 통합정책 해외 사례 소개 및 적용 방안
공동주최	전라북도 국제협력과



다문화·외국인정책 역량강화 워크숍

일시	2019년 12월 20일
장소	수원 팔달구보건소
대상	외국인대상 직무자(지역보건, 방문간호, 예방접종)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이주민 체류동향 • 이주민 보건의료정책 및 현황 • 정책적 쟁점: 건강보험제도 개편



후속세대 양성사업

이민정책의 현상과 정책연구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 등 후속세대에게 현장 중심의 강의 및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연구자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세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전년도 시범사업 운영을 보완하여 교육대상을 일반대학교 학생으로 확장하고 홍보에 주력함으로써 대학에 이민정책 분야에 대해서 알리고 연구자의 인력풀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차세대 이민정책 아카데미

일시	2019년 8월 8일 ~ 9일
장소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대상	이민·다문화 관련 학과 대학(원)생
	1일차 57명, 2일차 53명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이민정책의 역사와 특징 • 이민자 통합정책과 NGO의 역할 • 국제이주와 글로벌 거버넌스 • 이민정책 연구 실제
공동주관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제주대학생 이민 현황 교육

일시	2019년 11월 13일
장소	이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대상	제주대학교 교수 및 학생 31명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이민정책 현황 • 이주민 가족관련 정책 • 이주민 가족 연구



체류외국인 사회통합 교육

현행 외국인 대상 교육은 대체로 조기 정착지원 교육 및 한국어교육에 주력하고 있어 중장기 체류외국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현안에 부응하여, 담당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체류외국인 유형별 교육을 기획하였다. 특히 올해 교육은 커뮤니티 리더나 외국인유학생 등 중간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을 교육함으로써 앞으로 이들을 통한 정보의 확장 등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Financial literacy seminar: Understanding Korea's Financial Services for Filipinos in Korea

일시	2019년 8월 14일
장소	주한필리핀대사관 Sento Rizal Hall
대상	필리핀 대사관직원 및 커뮤니티 리더 30명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상품 이해하기 • 은행 이용하기 • 카드 및 보험 이용하기 • 금융사기 예방
공동주최	주한필리핀대사관



외국인학생 진로탐색 및 취·창업 비자 워크숍

일시	2019년 11월 26일
장소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강의실
대상	외국인유학생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 후 진로탐색 및 취업 준비 정보 제공 • 졸업 후 취·창업 사증 취득 조건 • 쟁점에 대한 질의 응답
공동주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 및 사회적응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이다.



일시	사업명	대상	장소
2019. 1. 1. ~ 12. 31.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외국인유학생 밀집지역외국인 예술·흥행외국인	성결대학교 등 39개 대학 대구사이버대학교 서울학습관 등 21개 밀집지역 외국인센터 16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2019. 12. 17.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멘토 역량강화 워크숍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활동 멘토	코레일 광명역 회의실(KTX)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활동 멘토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2019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활동 멘토 대상으로 체류 유형별 출입국 관련 법·제도에 관한 내용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국내 정착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설명하고, 멘토들이 프로그램 내용을 정확하게 통역할 수 있도록 통역 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제고를 위해 상황 훈련을 통한 소통 및 공감능력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민간활동가 양성사업

‘협력에 바탕한 미래지향적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한 협력 대상인 이민·다문화 관련 지원센터 종사자 및 NGO 활동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민정책과 이민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특히 이민정책 분야 연구 및 출입국행정 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섭외함으로써 실무에 도움이 되는 현장감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이민정책·이민법 열린 강좌	
일시	2019년 9월 17일 ~ 18일
장소	이민정책연구원 대회의실
대상	이민·다문화 관련 민간활동가 56명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정책과 지역의 역할• 이민정책과 민간 파트너십• 국적법의 이민정책적 쟁점• 출입국관리법의 이민정책적 쟁점• 재외동포법의 이민정책적 쟁점
공동주최	(사)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교육수요조사 실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신규 혹은 심화 교육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가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8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다문화전문가 양성대학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였고, 2019년에는 대상을 확장하여 보건소 근무인력, 일반대학 및 대학생, 민간활동가 대상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명	조사기간	분석대상자수
보건소 근무인력 이민다문화정책 수요조사	2019. 7. 8. ~ 7. 26.	916명
차세대 이민정책 아카데미 수요조사	2019. 7. 2. ~ 7. 14.	160명
민간활동가 대상 교육수요조사	2019. 4. 1. ~ 6. 30.	43명

이밖에도 교육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를 위하여 매회 교육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육생에 대한 이수증 발급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이민정책연구원의 교육사업 전문기관으로써 한 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민정책연구원의 교육은 대상별 특성에 맞춘 교육 기획으로 이민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점, 전문성있는 내·외부 강사진의 섭외로 수준높은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 이민정책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민간단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협력 사업

1월

2월

1.28.



OECD-이민정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호주한인연구 국제학술세미나

2.14.



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난민정책 수립
및 조사·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6월

6.19.



세계난민의날 기념 학술포럼

6.19.



이민정책연구원-강원대 난민연구센터
MOU 체결

6월~7월

6.23.~7.1.



메트로폴리스 아시아사무국
공동워크숍 개최

3월

2.21.



일본 대사관 방문 간담회

3.14.



필리핀 스칼라브리니이주센터 주최
국제회의 발표

5월

5.23.



연구원-서울연구원-대전세종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간담회

7월

7.3.



필리핀 이주노동자 금융교육 국제포럼

9월

9.19.



터키 이민청장 본원 간담회

10월

10.26.



이민정책연구원-선문대
정부간관계 연구소 공동학술대회

5.24.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5.25.



연구원-한국문화사회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5.29.



홍콩입경사무처
종견관리자급 방문간담회

11월

11.14.



이민정책연구원-서울대 행정대학원
공동주최 학술포럼

11.22.



연구원-법무부 공동주최
연구원 10주년 기념 세미나

12.5.



이민정책연구원-경북다문화지원센터
MOU 체결

구분	사업명	일자
유관기관 협력	난민정책 수립 및 조사·연구 협력을 위한 이민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간 협약 체결	2. 18.
	연구원-서울연구원-대전세종연구원-경남발전연구원 간담회 개최	5. 23.
	연구원-법무부 공동주최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개최	5. 24.
	연구원-법무부-강원대 난민연구센터 공동주최 '세계난민의 날' 기념 학술포럼 개최	6. 19.
	연구원-한국문화사회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개최	5. 25.
	연구원-강원대학교 난민연구센터 MOU체결	6. 19.
	한국이민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연구원 세션 개최	7. 5.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이민정책연구원 세션 개최	9. 26.~ 27.
	전남도청 본원 방문 간담회('인구과소지역 외국인력 제도')	10. 25.
	국내	연구원-서울대 행정대학원 공동주최 학술포럼 개최
국내MOU 기관 협력	연구원-법무부 공동주최 이민정책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세미나	11. 22.
	연구원-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MOU체결	12. 5.
	제3차 수도권 정책연구원 네트워크 세미나	12. 19.
	성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이민정책전공 개설 11주년 및 석박사 '이민정책연구회' 10주년 기념 이민정책포럼 후원	12. 12.
	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주최 포럼 개최(4회)	4.~9.
	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국제이주와 빅데이터 워크숍 개최(3회)	5.~7.
	연구원-계명대학교 공동학술대회 개최	11. 13.
	연구원-선문대 정부간관계(IGR) 연구소 추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10. 26.
	IOM한국대표부와 한아세안협력기금 사업 추진 협의	1. 17.
	OECD 이민자 통합지표 보고서 출판기념 세미나 공동개최	1. 28.
국제기구 협력	OECD 한국 노동이주정책 검토보고서 출판기념 세미나 공동개최	1. 28.
	OECD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1. 28.
	IOM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7. 18.
	미주개발은행과의 간담회/자문회의 참석	2. 13.
	UNHCR과 공동사업 업무협의	12. 10.
	메트로폴리스 국제회의 및 집행이사회(ISC) 참석	6. 23.~ 7. 1.
	메트로폴리스 아시아사무국 공동워크숍 개최	6. 23.~ 7. 1.
	메트로폴리스 아시아사무국 운영회의(4회)	8.~11.
	UNAOC&IOM PLURAL+2019 심사상영회 개최	8. 29.
	필리핀 스칼라브리니이주센터 주최 국제회의 참석 및 발표	3. 14.
국제 해외MOU 기관 협력	해외 MOU기관(스칼라브리니이주센터) 업무협의	3. 16.
	호주 디킨대 공동주최 국제포럼 개최	2. 2.
	호주 디킨대,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공동주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2. 14.
	일본 쓰쿠바대학 국제포럼 참석 및 발표	1. 21. ~ 23.
	일본 대사관 본원 방문 간담회	2. 21.
	필리핀 대사관 업무협의: 필리핀 노동자 대상 금융교육 수요조사 협의	1. 24.
	존스 홉킨스대학 연구자 본원 방문 자문회의	3. 14.
	前이민정책개발국제센터(ICMPD) 연구자 본원 방문 간담회	3. 27.
	홍콩입경사무처 중견관리자급 본원 방문 간담회	5. 29.
	버클리대학 연구자 본원 방문 간담회	6. 19.
해외기관 학자 협력	필리핀 이주노동자 금융교육 국제포럼 개최	7. 3.
	터키 이민청장 본원 방문 간담회	9. 19.
	독일 글로벌아시아연구소 연구자 본원 방문 간담회	11. 6.

주요 국내협력 사업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

주제	체류외국인 240만명 시대, 국민이 공감하는 지속가능 이민정책 방향 모색
일시	2019년 5월 24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법무부,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정성호,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법학회, 이민정책연구원



제12주년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내외국인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이민정책포럼을 국내 이민과 관련한 세 개 학회 및 법무부와 공동개최 함으로써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와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프로그램

구분	주제	발표 및 토론
세션1 (좌장: 김태환 교수)	이주의 시대, 혐오와 타자 만들기 외국인 혐오와 이민정책	발표자: 육주원 교수 토론자: 이창원 부연구위원 발표자: 김철효 박사 토론자: 라희문 교수
세션2 (좌장: 설동훈 교수)	이민정책의 통합과 외국인의 통합 고용부담금의 법적 쟁점	발표자: 김환학 박사 토론자: 이병하 교수 발표자: 노호창 교수 토론자: 문병기 교수
세션3 (좌장: 박종보 교수)	수익자부담 이민정책 추진방안 이민/난민 행정체계의 고도화	발표자: 오정은 교수 토론자: 강동관 선임연구위원 발표자: 조경훈 교수 토론자: 정광현 교수
종합토론 (좌장: 정기선 원장)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장, 이희용 연합뉴스 기자, 설동훈 한국이민학회장, 박종보 한국이민법학회장,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학술포럼

주제	이주의 시대, 난민에 대한 새로운 정책접근과 사회적 성찰
일시	2019년 6월 19일
장소	강원대학교
주최	이민정책연구원, 강원대 난민연구센터, 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6.20.)을 맞이하여 국내외 난민연구 및 지원 활동단체와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난민에 관한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는 토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난민제도 및 정책발전에 기여하고자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전문가 뿐 아니라 시민단체, 일반청중 등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난민과 난민제도에 관한 국민 인식 및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구분	주제/발표	토론자
session1	난민과 국제개발협력 - 국제난민지원을 위한 국제개발 협력사례 (성상미, 前 굿네이버스 탄자니아 사무장) - 한국의 난민정책과 국제개발협력의 연계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 제인 윌리엄슨(UNHCR) - 공선주(아시아평화디딤돌) - 김태진(KOICA) - 이호택(피난처)
	한국의 난민정책 쟁점: 인식, 법 그리고 현실 - 난민법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김정도, 법무부 난민과장) - 난민수용 이후 사회통합 과제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일(공익법센터) - 백상준(국회입법조사처) - 이인숙(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 장주영(이민정책연구원)
session2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학회세션

주제	포용과 균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 혁신
일시	2019년 9월 27일
장소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주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련학회(50여개), 국책연구원, 시도 연구원 공동



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에 참여하여 이민정책연구원의 세션을 구성함으로써, 국내 인구문제 및 지역불균형을 해결할 방법 중 하나로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프로그램

구분	주제/발표	토론자
학회세션IV	포용과 균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 혁신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의 현황과 현안 (유민이·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의 평가와 전망 (김혜순, 계명대)	- 문병기(방송통신대) - 신지원(전남대) - 엄진영(한국농경제연구원) - 이창원(이민정책연구원)

※ 참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박람회란?

전국의 분권·혁신·포용·균형발전의 정책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행사로서, 2019년도에는 ①포용 ②혁신 ③분권이라는 균형발전의 3대가치를 주제로 개최되었고,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2019년도에 처음 참여하여 지역 인구문제와 균형발전에서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소개함

이민정책연구원-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 추계 공동학술 세미나

주제	다문화사회, 이민정책 그리고 사회통합
일시	2019년 10월 26일
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은양관광호텔
주최	이민정책연구원,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 한국비교정부학회, 충북대 국제개발연구소, 건국대 지식콘텐츠연구소



연구원과 MOU체결기관인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2018. 1. 18 체결)는 ‘다문화사회, 이민정책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이민자들의 실질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부터, 이민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한 ODA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향후 연구원의 연구분야의 다양성을 넓힐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프로그램

구분	주제/발표	토론자
session1	다문화와 ODA	- 두정수(前 파나마대사)
	일본의 다문화가정과 국제개발협력(네모토 마사쓰구, 충북대)	- 이장희(강동대)
	지적재산권을 통한 ODA사업추진에 있어 다문화가정의 참여방안 (최영출·김학실, 충북대)	- 노영희(건국대) - 최종암(충청신문)
	이민정책과 지역	- 장지표(인하대)
session2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분권의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의 현황 과제	- 김진영(충남연구원)
	국내 지역추천 이민자 선발방식 논의: 캐나다 주정부 추천 이민자 선발제도의 시사점(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 강동우(한국노동연구원) - 우삼열(아산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session3	이민정책과 지역	- 이창원(이민정책연구원)
	영미국가의 다문화평등 비교연구(강혜정·권경득, 선문대)	- 권현중(다문화종합복지센터)
	한국의 다문화차별금지 정책과 향후 방안 (이광원·권경득, 선문대)	- 이종익(뉴시스) - 유수동(선문대)

이민정책연구원-서울대 행정대학원 공동 포럼

주제	이민정보원 설립 필요성과 구성·역할
일시	2019년 11월 14일
장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최 이민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체류외국인 240만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 및 이주민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논의의장을 마련하고, 이 학술포럼을 통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증거기반(evidence-based, data-driven) 이민정책의 중요성과 향후 연구의 방향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프로그램

구분	주제/발표
session1	이민정보원 설립 필요성과 구성 및 역할 이민정보원 설립 필요성과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제언(김준형, 서울대) 증거기반 이민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환경진단과 과제(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session2	종합토론 김영근(이민정책연구원), 기정훈(명지대), 홍길표(백석대), 정총식(경성대)

제3차 수도권 정책연구원 네트워크 세미나

주제	수도권 외국인·다문화정책을 함께 고민하다
일시	2019년 12월 19일
장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주최	이민정책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수도권은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이지만, 지역 차원에서의 이민·다문화정책이 체계적으로 발전해있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국내외적으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이민·다문화정책 개발이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이민정책연구원과 6개 수도권 정책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시여성가족재단)은 지역을 주제로 한 이민정책, 다문화정책 연구를 공유하여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수도권 정책연구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019년 세 번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프로그램

구분	주제/발표
발제	지방자치단체 이민·다문화정책 행정 경기도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한국생활(김영혜, 경기 가족여성연구원) 분권의 관점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이민정책 진단(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종합토론	종합토론 박재규(수원 여성문화공간 휴), 이혜숙(서울연구원), 강희영(서울시여성가족재단), 최정호(인천시여성가족재단)

주요 국제협력 사업

OECD-이민정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주제	1부: How does Korea compare with other OECD countries in integration of immigrants? 2부: OECD Review of Labour Migration Policy in Koreaon the future in light of international experience
일시	2019년 1월 28일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주최	OECD,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OECD-이민정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1부에서는 OECD의 이민자 통합지표에 대한 학제 및 정책입안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OECD 회원국과 한국의 이민자 통합성과를 비교하였다.

※ OECD가 2012년부터 3년마다 발행하는 이민자 통합지표 보고서의 2018년 보고서에는 법무부·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17’을 활용한 한국 사례가 포함되었다.

2부에서는 OECD의 한국 노동이주정책 검토보고서(Recruiting Immigrant Workers: Korea) 출판을 기념하여 한국의 노동이주정책에 대한 OECD의 평가를 청취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프로그램

구분	주제	발표자
1부	OECD회원국의 이민자 통합결과 한국의 이민자 통합결과	Jean-Christophe Dumont(OECD) 이창원(이민정책연구원)
	토론: 강동우(한국노동연구원), 최영일(김포외국인주민지원센터)	
2부	OECD의 한국 노동이주정책 검토보고서 주요결과 한국의 외국인력정책: 행정과 과제	Jonathan Chaloff(OECD)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토론: 이연복(한국산업인력공단), 최서리(이민정책연구원)	

이주노동자 초국적 금융교육 국제포럼

주제	Designing Transnational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for Filipino Workers in Korea
일시	2019년 7월 3일
장소	한-아세안센터 아세안홀
주최	이민정책연구원



이 포럼은 이주노동자 대상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한국과 필리핀의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한-필리핀 간 금융교육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이주 노동자 가족의 초국적성과 순환이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주의 전 과정에 걸친 금융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구성, 송출국과 수용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함께 개진하였다.

프로그램

주제	발표 및 토론
이주노동자 대상 다자간 금융교육	장주영(이민정책연구원)
필리핀 내 이주노동자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	Stella Go(De La Salle University)
한국 내 이주노동자 금융교육과 귀환 지원	MCM Valderrama(주한필리핀대사관)
종합토론	김민정(충남대), 엄은희(서울대), 이기호(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연구 사업



연구보고서 01

국내 가족이민 연구: 가족이주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장주영

공동연구자 | 박민정

연구 목적

- 가족이민과 관련된 정책 개선과 가족이민 연구 확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주요내용

- OECD 주요국의 가족이민 정책과 현황
- 국내 가족이주 현황
 - 가족이주 관련 체류 자격과 체류자격별, 성별, 지역별 현황 검토
- 조사통계를 활용한 가족이주 현황 분석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분석을 통한 가족결합 현황과 잠재적 수요 분석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동거가족 현황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정책 제언

- 가족이민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기반 마련에 대한 검토 필요
- 가족이주 현황 파악에 필요한 통계자료 수집과 공개를 통한 연구 활성화
- 가족이주와 사회통합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



연구보고서 02
육로개방시대의 국경관리에 관한 기초연구: 남북경협에 따른 출입 및 출입국관리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이정우, 유민이 공동연구자 | 최서리, 이병하, 김환학, 정유석, 최효원

연구 목적

-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로 육로개방시대가 되었을 때, 한반도의 환경변화를 전망하여 육로국경 관리의 정책방안 제시
- 육로개방시대의 개념과 의미
- 국경관리의 의의와 패러다임
 - 오늘날의 국경관리는 국경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전통적 기능 뿐 아니라,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경제·문화적 협력, 지역공동체간 소통과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역할 수행
- 육로국경관리의 경제 및 이주에 대한 환경 전망
- 남북 경계지역에서의 출입국관리 제언
- 육로국경관리에 관한 남북한 협력방안 및 정책제언
- 현대적 국경관리의 패러다임에 따라 안보적 기능의 전통적 국경관리와 동시에 공동번영과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확장하는 ‘사람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혁신 필요
 - 경계지역에서 남북 국경관리기관의 합동근무
 - 출입·체류·신변안전보장에 관한 규범의 통합
 - 대량이주에 대비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협력으로 다층적 협력 형성
 - 구체적인 국경관리의 로드맵과 매뉴얼 개발

주요내용

정책 제언

연구 목적

- 국민의 난민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난민에 대한 인식, 난민과 난민 정책에 대한 태도를 분석
- 난민에 대한 태도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 난민에 대한 인지도 분석
 -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인지는 높지 않음
 - 난민에 대해 경제적 빈곤의 이미지가 강하며, 이를 난민 인정 사유로 오해하는 비율이 높음
 - 난민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편임
 -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난민에 대한 태도 차이는 뚜렷하지 않음
 - 난민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가 난민에 대한 태도와 유관한 것으로 드러남
- 난민 관련 개념이나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필요
 - 주관적 인지도가 난민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난민법상 보장된 권리에 대한 충분한 보장 체계 확립 필요
 - 난민법상 인정된 권리에 대한 옹호적 태도가 나타남
- 난민심사의 공정성 확보와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주요내용

정책 제언



연구보고서 04
무사증 입국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 유민이, 이정우

연구 목적

- 국내 무사증 입국제도의 현실을 진단하고, 경제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무사증 입국제도의 개선안 제시

주요 내용

- 무사증 입국제도의 목적, 개념 및 유형
 - 협정에 따른 사증면제, 지정에 따른 무사증 국가 지정 구분
- 무사증 입국제도의 현황 분석
- 무사증 입국제도로 인한 긍정적 효과 예측
 - 인적교류, 사증발급 비용 절감, 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효과, 국제 우호관계 증진
- 무사증 입국제도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
 - 불법체류 및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외국인 범죄 및 허위난민 신청자의 증가 등
- 무사증 입국제도의 해외사례 분석
 - 사전 입국관리 강화(미국), 체류관리 강화(일본), 무사증 입국 개방(홍콩, 싱가포르)
- 무사증 입국제도 개선안
 - 우선순위 분석에 따라 입국관리강화>무사증 입국국가 전면재검토>체류관리강화>무사증 입국국가 확대 순으로 조사됨

정책 제언

- 「출입국관리법」에서 무사증 입국제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단순화
 - 입국관리 상의 개선방향 도출
 - ETA의 시범도입 및 전진적 확대
 - 무사증 입국국가 지정 및 재검토 시 주요원칙과 체크리스트 적용
 - 기타 무사증 입국제도에 대한 정책 PR 필요



연구보고서 05
보건소 근무인력의 이민·다문화정책 교육현황 분석 및 개선안

연구책임자 | 박민정

공동연구자 | 장주영, 강동관, 김혜경, 신소희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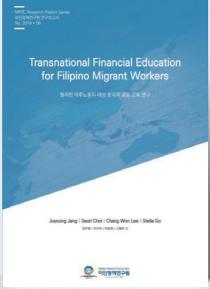
- 이민정책연구원의 교육수요조사 시리즈의 일환으로 보건직 근무인력의 이민·다문화정책에 대한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 방안 및 프로그램 제시

주요 내용

- 국내 이민·다문화정책 관련 교육현황 분석
- 보건직 근무인력 교육수요조사 실시
 - 보건소 근무인력의 문화적 민감성 및 문화인식 수준 측정
 - 보건소 근무인력의 관련 교육 경험 및 항목별 교육 필요 정도 분석

정책 제언

- 보건소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설
 -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과는 별개로 보건소에서 요구되는 예방접종, 모자보건,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교과목 개발 필요
 - 보건소의 인력구성이 정규직 외 공무직과 기간제의 비중이 크므로 교육 대상의 확대 필요
 - 우선 밀집지역 보건소 대상 문화민감성 제고 교육 병행
- 교육 참여 독려 방안 모색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협의하여 보건직 대상 보수교육 과정 개설 검토
- 이주민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커뮤니티 케어 등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필요



연구보고서 06

**Transnational Financial Education
for Filipino Migrant Workers**

연구책임자 | 장주영 공동연구자 | 최서리, 이창원, 스텔라 고





연구보고서 07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본국초청가족의 한국생활 연구**

연구책임자 | 허정원 공동연구자 | 장주영, 육수현, 박민정, 고민경, 김경민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체류 필리핀 고용허가제(E-9)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적 금융교육의 필요성 검토와 방향 제시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금융문해력과 금융행동 ■ 한국과 필리핀의 이주노동자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이주민 일반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초기 단계 - 필리핀은 이주노동자와 본국 체류 가족에 특화된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이주의 전 과정에 걸친 이주노동자와 본국 가족대상 초국적 금융교육 필요 ■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금융문해력과 재무관리 행동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대다수가 본국에 송금하지만 가족과 재무관리에 대해 소통하는 비율은 낮음 - 투자, 필리핀 귀환 후 창업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음 - 한국 금융시스템을 통해 적극적 재무관리 가능하도록 금융교육 제공 필요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노동자 대상 상담·교육 제공하는 필리핀인 대상으로 한국 금융시스템 정보 전달 ■ 귀환교육 프로그램에 금융교육 추가하여 통합교육 실시 ■ 한국 체류 이주노동자와 본국 거주 가족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연계 실시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본국가족 초청의 경험을 탐색하여 정책적 시사점 제시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와 본국초청가족 사증의 제도적·정책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가족(F-1-5) 사증 발급 신청 증가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본국가족 동거 현황과 동거 여부에 따른 가족·사회생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국가족과 동거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고 동거하는 본국가족으로부터 자녀 돌봄에 도움을 받음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본국초청가족 대상 면접조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음식, 가족관계에서 본국초청 가족과 한국인 배우자 가족, 한국 생활 가족 간의 문화 교차가 발생 - 본국초청가족의 돌봄 노동 제공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와 경제활동 참여 증진 -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와 정체성 유지, 정서적 안정감에 긍정적 영향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국초청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증제도 개발 고려 필요 ■ 본국초청가족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적 자료 구축 ■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가족관계를 고려한 정책과 본국초청가족의 국내 체류에 필요한 서비스, 제도 마련 필요

연구보고서 08
**국내 체류 이주민의 취업 및 사회생활:
베트남 출신자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이창원 공동연구자 | 최서리, 장주영

연구 목적	■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활용하여 베트남 출신 이주민의 취업, 가족 및 사회 생활 특성 분석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이주민의 한국행 이주의 역사와 특징 ■ 베트남 출신 이주민 특성 분석: 인구, 취업, 가족 및 사회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국적자와 귀화자 모두 교육수준과 한국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임금도 낮은 편임 -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살고 있으며 한국에 정주하거나 한국국적 취득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임 - 베트남 출신 국내 유학생은 32%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취업활동을 하고 있음 - 유학 후에도 한국에 계속 체류를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출신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내용과 장소, 시간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 모색 ■ 베트남 출신 이주민 대상 취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욕구가 높은 집단이므로 취업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 -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취업신고 과정 간소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 신고 간소화 및 현실화를 통해 미신고율 감소 유도

연구보고서 09
신남방정책과 한국-아세안 이민협력

연구책임자 | 조영희 공동연구자 | 최경희, 백용훈

연구 목적	■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이민정책 간 정책 연관성을 한국-아세안 간 인적 이동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상호 호혜적 발전을 위한 한국-아세안 간 이민협력의 정책 방향 제시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아세안 간 쌍방향 이주 현황 ■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역사와 신남방정책 출현의 이민정책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남방정책은 경제적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난 30년 한국-아세안의 협력관계를 넘어선 - 사람중심(people-centered)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신남방정책은 한국-아세안의 인구이동과 관련 정책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됨 - 상호 호혜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사람중심' 가치도 더욱 구체화, 내실화 됨 ■ 신남방정책 시기 한국-아세안 이민협력의 국제적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주요 이민자 송출지역인 아세안의 이주동향과 이민협력의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아세안의 인력과 인구를 활용하고자 하는 동아시아 국가들(한·중·일)의 이민협력 동향에 대한 구조적 차원의 비교 중요함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행정 분야 협력의 내용과 방법의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비자협력 체계 구축, 이민당국 간 실질적 교류활성화(양자 및 다자), 아세안 주요 국제 공항에 이민연락관 확대배치, 아세안 각국의 출입국정보화를 위한 협력 강화, 한-아세안 상호 이주에 관한 통계 기반 구축과 공유 등 ■ 저숙련노동의 이주 전(全) 과정에 대한 송출국과의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과 체류관리에 초점을 두었던 저숙련노동의 이주 관리로부터 국내 체류 중 '통합'과 귀국 후 '분국재통합'을 위한 송출국과의 유기적 협력 ■ 아세안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한국의 '육성형' 이민정책 논의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기술인력, 유학생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한-아세안 호혜적 발전 추구

연구보고서 10
이주민 의료서비스 제공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 장주영 공동연구자 | 박민정, 강동관, 이재경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현장의 사례를 조사하여 당면 문제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 이주민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이주민 건강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민 대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도가 높음- 체류자격, 체류기간, 국적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와 의료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남- 이용하는 의료제공 기관별로 이용 어려움의 이유가 다르게 나타남. 병의원 이용자는 비용 부담과 의사소통 어려움이 가장 큼■ 이주민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실태와 개선점<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민에 대한 낮은 수용성으로 의료지원에 비우호적인 경우 많음- 의료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의료서비스 프로토콜 확립 필요- 체류자격, 체류관리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서비스 제공 어려움- 언어소통 문제와 건강문해력 부족의 복합적 문제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제공 어려움■ 이주민 대상 의료체계에 대한 정부 주도의 로드맵 필요■ 언어 차이, 국가 간 의료체계의 차이로 인한 정보 부족 극복을 위한 자료 제공 포털 개설 제안■ 이주민 대상 예방적 교육과 의료체계 이용 교육 제공
주요내용	
정책 제언	

연구보고서 11
분권의 시각에서 본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 현황

연구책임자 | 유민이 공동연구자 | 이해경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이민정책의 분권화 정도와 지역 수요에 기반한 이민정책의 관계를 모색함으로써 이민정책에 있어 ‘지역맞춤형 이민정책’을 위한 방안 제시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 현황 분석<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관련 조례, 조직(인사), 업무내용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분권화 정도 분석<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분권화 지표(조직/인사부문 분권화, 사무배분, 재정배분)를 적용하여 광역자치단체의 분권화 정도 측정■ 광역자치단체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정부간관계(IGRs) 유형화<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권화 정도에 따라 동반자, 대리인, 상호의존모형으로 지자체 유형화■ 유형별 지자체 이민정책의 내용 분석<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권화가 높은 지자체 유형에 속할수록 지자체 맞춤형 이민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현황 분석■ 지자체 외국인/이주민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에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포괄적 법적 근거 마련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상 명확한 국가 및 지자체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무의 배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 마련■ 중앙 차원에서는 상향식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 지방 차원에서는 중장기 관점의 지자체 이민 정책 수립 및 실무자 역량강화 필요

정책보고서 01
'가족' 사증제도와 가족(재)결합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 민지원

연구 목적

- 사증제도 중 가족 관련 장·단기체류자격의 유형, 대상, 활동 범위 등을 살펴봄. '가족 사증제도' 용어를 처음 제안해 '가족'이 사증이라는 체제(system) 속에서 프로그램화되어 있음을 밝힘
- 체류자격에 따른 가족(재)결합의 차등적 인정과 사증의 협소한 가족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가족 사증제도의 구성·운영에 반영된 가족(재)결합의 정책적 관점 및 방향 분석
- 가족 관련 장·단기체류자격의 유형, 대상, 활동 범위 소개 및 세부체류자격의 내용 및 현황 파악
- 가족 관련 체류자격을 통한 '가족'의 범위 분석
- 가족 사증제도의 한계 및 정책 제언

정책 제언

- 가족은 사회통합을 위한 매개체로 가족(재)결합 정책은 중요.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체류자격 소지자의 방문동거(F-1) 제안
- '가족'의 범위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체류자격 요청. 국내법상 '가족'의 범주가 아닌 부양이나 책임의 관계에 대해 체류자격 부여 필요
- 출산과 양육 이외에도 체류자격 연장 혹은 가족 초청의 사유를 다원화할 필요. 체류자격과 출산·양육의 조건화된 관계는 개인의 삶의 형태와 가족 유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
- 산재나 사고로 인해 장기간 치료 중인 사람을 간병하는 가족에게 방문동거(F-1)로의 체류자격 제언

정책보고서 01 QR 코드

정책보고서 02
이주민에 대한 국민수용성 제고사업 추진현황 및 과제

연구책임자 | 유민이

연구 목적

- 통합프로그램 중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모색

주요 내용

- 이민통합정책으로서 국민수용성에 대한 개념정의
- 국민수용성 제고 사업의 분석
 - 투입요소: 수행부처, 예산
 - 활동요소: 사업특성, 추진체계, 사업대상, 사업유형
 - 산출요소: 성과
- 각 분석요소 별 개선방안 제시

정책 제언

- 사업대상별 유사·중복 문제를 부처별 연계를 통해 극복
 - 부처별 연계의 사례 제시
- 동일한 사업을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중복적으로 포함하여 명확한 예산규모를 파악하는데 혼란을 주는 현황에 대하여 기본계획 작성 시 실무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자세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성과를 단편적인 산출물(output)로 측정하지만, 프로그램의 목적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의 결과(outcome) 또는 중장기적 효과(impact)로 전면 재개편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내용에 있어 이주민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도자료 배부 등의 홍보계획에서 가짜뉴스 근절 및 창의적 홍보를 위한 계획으로 채널다양화 필요

정책보고서 02 QR 코드



정책보고서 03
외국인 불법고용주 제재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 최서리 공동연구자 | 김철효, 한준성



정책보고서 04
중국동포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책임자 | 박경숙, 이창원 공동연구자 | 강미선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불법고용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중장기적 이민정책방향과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외국인 불법고용 유형 및 현황 ▪ 국내 외국인 불법고용 원인과 불법고용주 제재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외국인 불법고용 구조적으로 고착화 - 현행 불법고용주 제재 실효성에 회의적이나, 근로감독 강화, 근로조건 보호, 외국인 불법 고용 처벌 및 집행강화를 통해 실효성 제고 가능 ▪ EU의 외국인 불법고용주 제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지침은 다방면의 불법고용주 제재(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명시 - 불법고용주 제재라는 정책수단을 집행하기 위해서 상당한 자원 필요, 가용 자원이 제한적인 경우 제재 실효성 저하 - 불법고용 대상인 외국인이 문제해결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 필요 ▪ 외국인 고용 허가기준 합리화를 통해 법질서 존중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국한된 외국인 불법고용 개념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불법고용의 내용을 구체화·유형화, 처벌에 대한 기준 정립 - 외국인 불법고용 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정부 대응방식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고용주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 차단 - 외국인 불법고용의 직·간접 수혜자 모두 처벌의 대상으로 고려 - 행정기관의 행정력 강화 및 상호협조
정책 제언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대 이주민 집단인 중국동포의 생산연령인구와 고령인구 비율 변화를 분석 및 추적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조선족 인구구조와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2010년 중국 조선족 중 65세 이상이 4.6%에서 11.2%로 증가 - 2010~2050년 조선족 인구추계 결과 1,830,929명에서 992,749명으로 감소 - 동기간 부양비는 24.4%에서 94.5%로 급격히 상승 전망 ▪ 국내 중국동포 인구구조와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2017년 기간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4%에서 21.8%로 급증 - 동기간 생산연령인구(15-59세) 비율은 89.2%에서 76.2%로 감소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동포 중 생산연령 이외 유소년 및 고령인구 유입에 대한 준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소년의 학교 및 사회통합, 고령인구 간병 및 돌봄 수요 대비 필요 ▪ 인구구조 분석과 추계를 위한 행정통계 구축 관련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체류에서 귀화자 및 이주배경자녀까지 집계 가능한 데이터 구축 필요 - 출신국적별 1세 단위의 연령별 수가 제공되어야 함



정책보고서 05
**내·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사회전문가 제도:
10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연구책임자 | 조영희 공동연구자 | 강정향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에 도입된 다문화사회전문가 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개선책을 제시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사회전문가 제도 도입의 법적·정책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기반으로 도입 후, 2012년 출입국관리법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및 전문인력 양성 법적 근거 마련 - 제도의 초기 정책적 추진배경은 다양함(국민대상 다문화교육 강사 교육, 이민자대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강사 교육, 대학의 이민정책 연구·교육역량 강화) ■ 다문화사회전문가 제도의 시기별 발전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주도의 단기양성교육 중심 시기(2008-2012) - 학위과정(학부, 석사, 박사) 개설대학 중심 교육 확대 시기(2013-현재) ■ 다문화사회전문가 제도 관련 최근 논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정체성(전문성의 개념, 범위, 내용 등) - 다문화사회전문가의 활용 및 진출경로 ■ 단기적 차원의 문제해결이 아닌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정체성과 역할을 고려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드맵에 따른 단계별 유기적 교육체계로 개편 및 역할과 활용방안 제시 ■ 구조적, 체계적, 실행적 차원에서의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관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의 개선, 추진체계 간 협력(법부부, 유관부처, 지자체, 학위개설대학협의체 등), 사회 통합프로그램 강사 현장역량 강화 기회 지원, 교육생의 이수·보수 교육의 질과 체계 관리,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적자원 DB 구축 및 관리 등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적 상징의 착용 규제에 대한 프랑스, 독일, 캐나다의 법제도의 내용 및 유형, 사회적 배경, 법적 쟁점 소개하고 한국 사회에 시사점 제공 ■ 프랑스, 독일, 캐나다 세 국가의 종교적 상징 착용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배경, 내용, 입법 유형 ■ 세 국가의 판례 및 유럽인권재판소 결정 등을 비교 분석 ■ 세 국가와 한국의 사회적 배경 및 종교 지형(종교별 인구분포, 식민지 및 이민 역사, 중앙과 지방의 관계) 비교 분석 ■ 종교적 상징 착용에 대한 규제가 국내에 주는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유럽의 식민지 역사 등 차이가 있는 한국에서 종교적 상징의 규제는 시의적절하지 않음 ■ 새로운 종교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종교적 상장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예방 교육의 필요성 ■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 현재는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가능 ■ 종교적 토착화의 역사적 경험이 장기적으로 완충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인 갈등과 충돌의 방지를 위한 상호 대화의 노력 ■ 학교와 일터에서 종교적 소수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합리적 배려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시행



정책보고서 06
**종교적 상징에 관한 국제적 법제 및
사례 연구: 프랑스, 독일,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민지원 공동연구자 | 조규훈

정책보고서 07
난민정책과 ODA정책의 연계

연구책임자 | 조영희

공동연구자 | 김성규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정책과 ODA정책의 연계 합리성을 살펴보고, 그러한 정책적 연계가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 도출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정책과 ODA정책 연계의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인도주의정상회담(2016) 계기,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 논의로 확대되면서 난민이 ODA정책 대상으로 부각 - 유엔의 난민에 대한 글로벌컴팩트(2017) 계기, 국제협력 방식 다각화 ▪ 해외 선진공여국(OECD/DAC)의 난민정책과 ODA정책 연계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을 제외한 모든 OECD/DAC 회원국은 국내 난민문제에 대해 ODA를 활용. 2016년 이후 해외 선진공여국 내 난민지원을 위한 ODA 규모가 일반인도주의적 지원규모보다 높음 - OECD/DAC에서는 선진국의 국내 난민에 대한 ODA 적용을 투명하게 비교, 분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in-donor refugee cost)을 2017년 구체화 ▪ 해외의 연계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는 난민업무의 주무부처인 이민난민시민부에서 자국 내 난민에 대한 ODA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일본은 ODA정책 총괄부처 및 그 실행기관과 협업하여 자국 내 난민에 대한 ODA 사업을 추진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관련 ODA 사업 내용의 중복 방지 위한 부처 간 전문성 협력 ▪ 난민정책과 ODA정책의 ‘직접적’ 연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DAC 기준에 따라 국내 인도적체류허가자에 대한 ODA 지원 - 재정착난민의 유입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존 ODA 교육사업과 연계 ▪ 난민정책과 ODA정책의 ‘간접적’ 연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난민을 ODA의 직접적 대상으로 규정 - 난민관련 업무 부처(법무부, 외교부)간 실무적 차원의 소통·협력 강화

정책보고서 08
일본의 취업이민제도 최근 변화와 정책적 함의

연구책임자 | 최서리

공동연구자 | 이창원, 신예진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입관법 개정으로 기능외국인력 도입경로를 마련하고, 취업이민 체계를 정비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취업이민정책 개관: 기능실습제도, 경제동반자협정, 고도인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실습생 통해 노동력 수요 총족 - 2015년 건설업 시작으로 기능실습생 체류기간 연장 - 동남아시아 3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에서 간호 및 개호 분야 외국인 채용 - 2019년 4월부터 특정기능 자격 신설 통해 다양한 기능수준의 외국인 채용 ▪ 일본 취업이민 추진체계 및 신입관법에 따른 행정조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관리국 폐지, 장관급 기구인 출입국재류관리청 신설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일본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취업이민정책을 평가할 필요성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뿐만 아니라 단순기능직 외국인력에 있어서도 ‘유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 - 간호 및 간병 외국인력 도입 방안에 대한 체계적 논의 필요

**정책보고서 09
영주권제도의 해외사례 연구**

연구책임자 | 박민정 공동연구자 | 강동관, 장주영, 신소희

연구 목적

- 해외 주요국의 영주자격 취득, 갱신, 유지, 취소, 상실 요건을 검토하여, 현행 국내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영주권제도의 정책적 보완점 제시
- 현 영주제도의 특성 및 제도 변천과정
 - 현행 영주자격 규정, 취득, 취소, 상실요건, 갱신(재발급) 절차 검토
 - 영주자격 현황 관련 통계 분석
- 해외 주요국 영주권제도 사례 소개
 - 미국·캐나다(선발이민국가), 일본·중국(동아시아 주변국), 독일(유럽 중 영주이민자가 가장 많은 국가)을 선정하여 검토
 - 영주증 유효기간, 해당국 의무 체류기간요건, 재입국 허가기간, 취소 및 상실요건, 자발적 포기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국가간 비교
- 영주자격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적 관리 필요
 - 영주권 전치주의 시행에 따라 국적취득 전단계로 취득자격 검토 요망
 - 해당국 의무체류 기간 조항 개선
 - 영주권 포기제도 도입 검토
 - 영주자격 취소 및 상실 사유 점검 및 보완 필요
- 실효성 있는 제도보완을 위해서는 정확한 영주자격자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야 함

주요내용

정책 제언

**통계시리즈 01
호주 한인 1.5세와 2세 실태조사**

연구책임자 | 이창원

주요내용

-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인연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본원이 2017년에 실시한 호주 한인 1.5세와 2세의 한인 및 한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결과표 제시
 - 호주 한인 1.5세와 2세의 약 30%가 ‘대부분 케이팝을 듣는다’고 응답
 - 한인 2세의 31%가 하루 1회 이상 한국 포탈사이트 이용
 - 한인이라는 사실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호주주민사회 진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두 질문 모두 2/3이상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
 - 약 78%가 한국식 생활방식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음
 - 한국에 소속감 있다는 응답은 약 67%, 호주에 소속감이 있다는 약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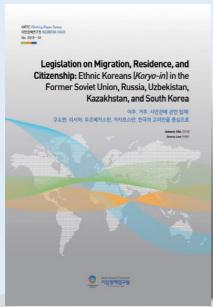
**통계브리프 01
쌍방향 이주 현황 및 통계 개선방안:
한국과 필리핀 사례**

연구책임자 | 이창원 공동연구자 | 최서리, 마루하 아시스

주요내용

주요내용

- 한국과 필리핀 간의 쌍방향 이주 현황을 양국의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필리핀을 송출국으로 한국을 수용국으로 하는 일방향 이주가 아닌 쌍방향 이주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7년 12월 기준 필리핀에서 취업허가를 받은 한국인 규모가 한국에서 취업허가를 받은 필리핀인 규모보다 더 큼
 - 한국에서 유학중인 필리핀인 수 못지 않게 필리핀에 유학 중인 한국인 수가 많음
 - 정확성 제고 및 편견불식 위해 국가 간 이주관련 데이터 협력 필요



워킹페이퍼 01

Legislation on Migration, Residence and Citizenship: Ethnic Koreans(Koryo-ins) in the Former Soviet Union, Russia, Uzbekistan, Kazakhstan and South Korea



연구책임자 | 민지원

공동연구자 | 이제우

주요내용

- 과거에서 현재까지 고려인들의 이주, 정착, 귀환과 법적 지위의 긴밀한 연관성을 밝히고 현재 무국적자 고려인의 이슈에 대한 법적, 정책적 방안에 대해 고찰. 이를 위해 구소련연방,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한국의 관련 법규 소개 및 분석



워킹페이퍼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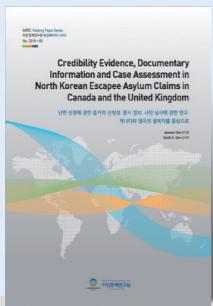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도 도입 시의 법적 쟁점



연구책임자 | 노호창

주요내용

-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단순기능인력임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교란 예방 및 적절한 유입 통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요구되는 실정. 또한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 사회통합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 이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적절한 통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재원으로서 고용부담금제도 도입에 대한 고려 필요.
- 해외 고용부담금제도 사례를 살피고 국내 고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리 검토해보아야 하는 쟁점들이 무엇인지 분석
 - 고용부담금제도 도입 시 사업주 측면에서는 법제도의 실효성 및 정당성 확보, 외국인 근로자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열악한 처지 심화 우려, 국가 측면에서는 부과기준, 징수주체, 재원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 필요
 - 한편, 최근 일본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문호를 넓히는 상황은 노동력 확보 경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워킹페이퍼 02

Credibility Evidence, Documentary Information and Case Assessment in North Korean Escapee Asylum Claims in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연구책임자 | 민지원

공동연구자 | Sarah A. Son

주요내용

- 유엔난민기구 통계, 영국 내무부 및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의 국가정보, 준사법기관의 결정 등을 통해 탈북자의 난민 신청 및 인정이 줄어든 현상을 분석
- 캐나다와 영국에서 탈북자를 포함한 난민 요청의 심사 과정에서 중요시되는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와 국가 가이드라인을 검토



이슈브리프 01
독일의 통합법 제정과
난민 노동시장 통합정책의 시사점



연구책임자 | 신소희
공동연구자 | 최서리

- 난민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난민 대상 국내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
- 2016년 7월 독일은 난민신청자와 인정자들의 노동시장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법 제정
 - 동법은 이들을 위한 노동시장테스트 완화, 취업기회 제공, 통합성과에 따른 장기 및 영주 거주허가 부여, 사회통합 교육 활성화, 거주지 할당 규정의 내용을 포함함
 - 난민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있어 통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특히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난민의 의무를 동시에 논의해야 함



이슈브리프 03
유럽연합(EU) 확대시기 영국의
이민정책 변화와 EU 탈퇴(Brexit)



연구책임자 | 최서리

- 2000년대 중반 이후 영국의 외국인 유입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친 2004년 영국 정부의 결정과 이후 영국 내 이민 관련 논쟁을 살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 제시
- 전 세계적으로 이민 관련 자료 수집과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한 적극적 투자 필요
 - 이민자 도입 규모 등 정책 목표 설정 시, 조사와 분석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정치적 선언은 현실과 목표의 괴리를 낳아 이민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 이민에 대한 대중의 이해 제고 필요,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생산성 있는 논쟁 가능



이슈브리프 02
일본의 재류특별허가제도의 시사점



연구책임자 | 최서리, 신예진

- 일본의 재류특별허가제도의 기원과 변천, 운영방식,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 논의
- 일본은 2000년부터 ‘일본에서 장기거주하고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족’을 재류특별허가의 대상으로 고려
 - 2006년부터는 재류특별허가제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요건들을 참조하여 외국인의 불안정한 법적지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원칙 수립
 -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지침 시행,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 강제출국 유예
 - 실질적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이슈브리프 04
2015년 대량 난민수용 이후
스웨덴의 이민정책 현안



연구책임자 | 최서리
공동연구자 | 신소희

- 스웨덴의 2015년 대량 난민 수용 이후 경험과 정책적 고민을 살펴보면서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
- 1985년부터는 통합정책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 2010년부터는 노동시장 통합이 중요한 정책의제가 되면서 고용센터의 역할 강조
 - 오랫동안 난민 대상 통합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합성과에 대한 비판
 - 스웨덴의 사례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서비스 공급기관의 전문성 강화, 성과관리의 필요성 등을 시사함

이슈브리프 05
**Refugee Resettlement in South Korea:
Challenges for Acceptance and
Integration**

연구책임자 | 조영희

- 정부가 2015년에 처음 시행한 재정착난민수용 시범사업(1, 2차)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간략히 소개하고, 앞으로 재정착난민제도를 정규적으로 운영할 시 고려할 정책과제를 제시
- 소규모(연간 30명 이내)로 수용된 재정착난민에게 정부가 기존의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정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재정착난민의 한국 사회 초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되었음
 - 이러한 재정착난민수용 시범 사업의 성공 경험은 한국의 난민수용과 사회통합을 위한 유용한 정책 시사점을 줌
 - 향후 정부가 재정착난민제도를 정규적으로 운영할 시 고려할 점: 재정착난민 수용 규모 결정의 합리적 메커니즘 확보, 재정착난민을 수용하는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재정착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명확화 및 존중, 난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한 관련 부처 간 실질적 협조 등

주요내용

이슈브리프 07
**이주민의 국가재정에 대한
기여 분석방안**

연구책임자 | 유민이

- 이주민이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규모를 추정하기에 앞서, 구체적 추정에 필요한 자료와 추산내용을 선제적으로 논의
- 2017년도 기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주민이 납부하는 세금규모는 1조 1,351억원에 달하지만 이는 국세 중에서도 직접세(소득세) 부문에만 해당함
 - 실제 이주민의 세금납부 규모는 간접세와 목적세도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도 포함됨으로써, 파악된 금액에 비하여 훨씬 높은 납부액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이러한 납부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여론왜곡이 발생함(2018년도 기준 이주민관련 공공지출: 약 8,569억)
 - 오히려 이주민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고국에서 정규교육을 마치고 입국하여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전 본국으로 돌아가므로 노동기간 동안은 내국인과 유사한 세금을 납부하지만, 받을 수 있는 정책적 혜택(연금, 의료, 교육 등)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주요내용

이슈브리프 06
**Marriage Migrants as Local Citizens and
Unsettled Status for Their Families
in Daejeon: Questioning “Glocal”
Reproductive Care in South Korean Households**

연구책임자 | 민지원
공동연구자 | 류유선

주요내용

- 사증제도 하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가족들에 의한 출산 지원 및 자녀 양육 등 대전 지역에서의 글로컬한 돌봄 실천 소개
-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법과 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국 및 지역 사회의 재생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 고찰

이슈브리프 08
Proposing Solutions for Peaceful Coexistence of Local and Foreign Workers in Korea's Construction Sector

연구책임자 | 심규범

주요내용

-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내국인, 그리고 건설업체의 입장 차이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며 국내·외 사례를 통해 내·외국인 공존 방안을 모색
 -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일자리 침해에 대한 내국인의 위기의식과 적대감, 불법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 간 충돌이 존재. 이러한 현상은 불법 외국인의 저임금과 저가수주 경쟁에서 비롯되는데, 건설업체로 하여금 불법 외국인을 선호하도록 만드는 핵심이유는 저임금 이라 할 수 있으며, 저임금에 대한 선호는 건설업체 간 수주를 향한 경쟁에서 야기
 - 건설업 분야 내·외국인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1) 정상적인 고용 여건 조성을 위한 적정 임금제의 시행 2)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경우 적정 규모의 합법 외국인을 허용 3) 합법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제도적으로 동등한 대우가 필요함을 제시

이슈브리프 09
Korean Government Policies on International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Focusing on its Intrinsic Dilemma

연구책임자 | 김도혜

주요내용

- 한국 정부는 고등 교육 영역에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많은 아시아 출신 유학생을 비밀리에 한국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게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음.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분석,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 한국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은 더 많은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비자 신청 과정을 완화하면서도 엄격한 관리 방식을 채택,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한 교육 기관(대학)의 직접적인 외국인 학생 관리 방식을 운영
-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중도탈락, 학업, 노동 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도록 제안



이슈브리프 10

In Search of New Governance of Overseas Korean Policy: The Rise of Multi-identity and Enactment of Framework Act



연구책임자 | 이진영

주요내용

- 재외동포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전 지구적 인구이동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에 직면하면서 장기적 국가발전을 모색해야하는 상황. 이에 재외동포를 활용하고 공동발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 재외동포정책의 새로운 거버넌스 요구 부상.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법 제정을 통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안
-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1) 정책의 기본원칙과 목표, 2)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의 정비, 3) 정책의 수립, 진행, 평가, 연구를 위한 기반 조성, 4) 정책 실행 계획의 정기성 확보, 5) 재원 및 예산 마련의 근거 확보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외동포정책에의 의미 확보



이슈브리프 11

Local Integration Policies for Migrants in South Korea



연구책임자 | 이용승

주요내용

- 이주민의 통합이 당장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임을 지적하면서 개인과 수용 사회(receiving society)의 고양을 지향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통합이 필요함을 강조
- 이를 위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이주민이 주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에서 안전하고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주민권의 실현 가능성을 탐색. 주민권의 유용성과 구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이주민과의 공존과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



이슈브리프 12

Analysis of the Correspondence Pattern with Master Plan for Immigration Policy and Its Future Strategy in Seoul



연구책임자 | 함인희 **공동연구자 | 박민정**

주요내용

-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양식을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함
 - 행정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시 체류외국인의 특성 파악
 - 제1차, 2차,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시기별 서울시 정책환경 및 대응양식 분석
- 서울시의 색깔을 살려 수요자 맞춤형 사회통합 정책 추진 시도
 -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시기 이후 정책적 변화 보임
 - 인권 분야 중심의 사업 배치, 문화감수성 함양 특화사업 추진
 - 정책대상자인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반영하는 창구 마련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 및 자립을 독려하는 사업 비중 높임
- 서울시의 외국인정책은 지자체의 독자적인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정부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특수한 가치를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정책 수립의 바람직한 선례가 될 수 있음

2019년 연구 실적 목록

분류	번호	제목	연구책임자
연구보고서	01	국내 가족이민 연구: 가족이주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장주영
	02	육로개방시대의 국경관리에 관한 기초연구: 남북경협에 따른 출입 및 출입국관리를 중심으로	이정우, 유민이
	03	난민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연구	장주영
	04	무사증 입국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유민이, 이정우
	05	보건소 근무인력의 이민·다문화정책 교육현황 분석 및 개선안	박민정
	06	Transnational Financial Education for Filipino Migrant Workers	장주영
	07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본국초청가족의 한국생활 연구	허정원
	08	국내 체류 이주민의 취업 및 사회생활: 베트남 출신자를 중심으로	이창원
	09	신남방정책과 한국-아세안 이민협력	조영희
	10	이주민 의료서비스 제공 실태 및 개선방안	장주영
	11	분권의 시각에서 본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 현황	유민이
정책보고서	01	'가족' 사증제도와 가족(재)결합에 관한 연구	민지원
	02	이주민에 대한 국민수용성 제고사업 추진현황 및 과제	유민이
	03	외국인 불법고용주 제재의 현황과 개선방안	최서리
	04	중국동포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박경숙, 이창원
	05	내·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사회전문가 제도: 10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조영희
	06	종교적 상징에 관한 국제적 법제 및 사례연구: 프랑스, 독일, 캐나다를 중심으로	민지원
	07	난민정책과 ODA정책의 연계	조영희
	08	일본의 취업이민제도 최근 변화와 정책적 합의	최서리
	09	영주권제도의 해외사례 연구	박민정
통계시리즈	01	호주 한인 1.5세와 2세 실태조사	이창원
통계브리프	01	쌍방향 이주 현황 및 통계 개선방안: 한국과 필리핀 사례	이창원
워킹페이퍼	01	Legislation on Migration, Residence, and Citizenship: Ethnic Koreans in the Former Soviet Union, Russia, Uzbekistan, Kazakhstan and South Korea	민지원
	02	Credibility Evidence, Documentary Information and Case Assessment in North Korean Escapee Asylum Claims in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민지원
	03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도 도입 시의 법적 쟁점	노호창

분류	번호	제목	연구책임자
이슈브리프	01	독일의 통합법 제정과 난민 노동시장 통합정책의 시사점	신소희
	02	일본의 재류특별허가제도의 시사점	최서리, 신예진
	03	유럽연합(EU) 확대시기 영국의 이민정책 변화와 EU탈퇴(Brexit)	최서리
	04	2015년 대량 난민수용 이후 스웨덴의 이민정책 현안	최서리
	05	Refugee Resettlement in Korea: Challenges for Acceptance and Integration Marriage Migrants as a Local Citizens and Unsettled Status for Their Families in Daejeon: Questioning "Glocal" Reproductive Care in South Korean Households	조영희
	06	이주민의 국가재정에 대한 기여 분석방안	유민이
	07	Proposing Solutions for Peaceful Coexistence of Local and Foreign Workers in Korea's Construction Sector	심규범
	08	Korean Government Policies on International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Focusing on its Intrinsic Dilemma	김도혜
	09	In Search of New Governance of Overseas Korean Policy: The Rise of Multi-identity and Enactment of Framework Act	이진영
	10	Local Integration Policies for Migrants in South Korea	이용승
	11	Analysis of the Correspondence Pattern with Master Plan for Immigration Policy and Its Future Strategy in Seoul	함인희
	12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연구	강동관
수탁보고서	01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 현황과 정책과제	조영희
	02	한-뉴질랜드 FTA를 활용한 전문직 해외진출 고용 및 수요현황 분석	강동관
	03	영연방 국가와의 FTA협정에 근거한 인력이동 활용방안	강동관
	04	카지노 이용자 출입제도 및 관리실태 조사연구	박민정
	05	난민법 주요쟁점 관련 해외 입법사례 연구	조영희
	06	출입국관리 전문시험과목 도입에 관한 연구	강동관
	07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후국내연수): 이주배경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와 건강	송영호
수탁연차보고서	0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연구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심화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음.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위험요인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유학생 활용방안, 현재 수요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이민제도 설계, 돌봄노동시장 현안 파악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함

이민 관련 거버넌스 연구

국내 체류외국인 규모와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고 그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복합적 이민행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분절적 이민정책 수립 및 추진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총괄적 이민정책 운영을 위한 이민정책 전담 조직 설치, 통합적 국경관리,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함

국내외 이민정책 환경 및 동향 분석

국내 행정·조사통계 분석, 해외의 이민정책 동향분석을 통해 이민정책 연구에 필요한 양질의 자료를 제공함. 무급가족 종사자 등 여성이민자 및 중국동포 현황 분석,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이민정책을 분석함



국내 협력

올해 국내협력은 '기존 MOU체결기관과의 지속적 협력사업 강화', '지역의 이민 정책을 주제로 한 협력사업', '정책의 현실적 접근을 위한 정부기관과의 협력사업 발굴'을 중심으로 진행함. 이민정책이 지역의 인구와 경제문제와도 연관된다는 확장성에 근거하여 지역내 이민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한 지역적 고민이 중앙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 차원의 협업을 동시에 수행함. 또한 기존 협력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이민과 관련된 새로운 협력기관 및 사업을 발굴하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세 가지 중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국제협력

지난 10년간 해외 연구 기관, 국제기구, 주한 대사관 등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킹에 기반한 글로벌 연구협력과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본원은 국제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음. 2020년에는 UN 아주 글로벌 컴팩트와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수립 등 전세계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현안들에 대하여 IOM, UNHCR 등 국제기구의 협력을 통하여 국내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한국 이민정책 연구의 중심 기관으로서 유관 기관의 정보 요청, 연구 협력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주제의 대중 및 전문가 대상 행사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 또한 국제협력 사업의 주요 목표로 삼아 추진할 예정임



자체 교육사업 운영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관련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수행하여 왔음. 주요 교육사업은 공무원, 후속세대, 민간활동가,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함. 현재 이민정책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1)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2) 수요조사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 3)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 4) 연구와 연계된 협력적 교육사업 진행을 추진하고 있음. 2020년은 교육의 체계화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교육을 정규화하는 동시에, 일반시민, 공공기관 종사자 등 신규 수요처 발굴, 교육대상 확대에 힘쓰고자 함

수탁 교육사업 운영

이민정책연구원은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제1지원단으로,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의 입국 초기 단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 및 사회적응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외국인유학생, 밀집지역외국인, 예술·흥행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포함 13개 언어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음. 이 외에도 조기 적응프로그램 활동 멘토 대상의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이민자 사회통합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위클리리포트 구독신청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국내・외
이민관련 뉴스와 정책 및 연구동향,
세미나 소식 등을 모아
매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위클리리포트
수신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mrtc.re.kr)에서
<Weekly Report> 정기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소식보기

이민정책연구원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mrtc.re.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RTC.RE.KR
트위터 www.twitter.com/MRTC_re_kr
카카오톡 채널찾기 @mrtc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Partner Organization of IOM

(081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양천빌딩 별관 2층, 3층

Tel 02.3788.8000 | Fax 02.3788.8098